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	-----

발의연월일 : 2020. 6. 16.

발 의 자 : 박용진 · 이소영 · 정성호
송옥주 · 이학영 · 정춘숙
전용기 · 민병덕 · 기동민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음.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

바,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및 제119조의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3조를 준용한다.
- ④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지가 있는 후에는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수인하는 것 외에 납세자 또는 체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 제6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② (생략)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p> <p>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p> <p>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1. 2. (생략)</p>	<p>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07조(납세의무자) ①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
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
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략)

<신설>

<삭제>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
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
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
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
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
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
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생략)

③ (생략)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재산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수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

분비가 채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지가 있는 후에는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채납처분을 수인하는 것 외에 납세자 또는 채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